
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송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12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9. 20.

발 의 자 : 송석준 · 김선교 · 이종배
김성원 · 주진우 · 유상범
조배숙 · 김예지 · 윤상현
박준태 · 강대식 · 나경원
곽규택 의원 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대상기관이 법원행정처,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, 가상자산이나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얻을 수 없어 재산은닉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‘가상자산사업자’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,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과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3 및 제21조의6).
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3제1항 본문 중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”를 “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”로 한다.

제2장제4절에 제2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6(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) ① 공사는 채무액이 2억원 이상이고 이행기가 도래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부실관련자 중에서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의 경우 그 인적사항·채무액 등(이하 “인적사항등”이라 한다)을 공개할 수 있다. 이 경우 채무액은 모든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액의 합계를 말하며, 이자 및 비용은 제외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체된 채무의 내용에 관한 다툼으로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공사는 부실관련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실관련자 명단공개심의위원회(이하 “명단공개심의위원회”

라 한다)를 둔다.

④ 명단공개심의위원회는 공개대상 부실관련자(이하 “공개대상자”라 한다) 선정, 소명내용 심의 등 명단공개에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⑤ 공사는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 부실관련자(이하 “공개대상자”라 한다)에게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임을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명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며, 통지 방법 등과 관련된 사항은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송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.

⑥ 제5항의 소명기간이 경과한 후 공개대상자의 소명내용 및 채무액의 변제실적 등을 고려하여 명단공개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한 후 공개대상자를 확정한다.

⑦ 제6항의 부실관련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제1항의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준, 공개대상선정 절차, 공개 기간 등 세부사항 및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1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1조의3(자료제공의 요구) ① 공사는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,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행정처,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<u>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</u>(이하 이 조에서 “공공기관 등”이라 한다)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과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금융회사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를 적용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1조의3(자료제공의 요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u>제21조의6(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) ①</u> 공사는 채무액이 2억 원 이상이고 이행기가 도래한</p>

날부터 2년이 경과한 부실관련
자 중에서 해외에 재산을 보유
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
련자의 경우 그 인적사항·채
무액 등(이하 “인적사항등”이라
한다)을 공개할 수 있다. 이 경
우 채무액은 모든 부실금융회
사등에 대한 채무액의 합계를
말하며, 이자 및 비용은 제외한
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체된
채무의 내용에 관한 다툼으로
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
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단을
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공사는 부실관련자의 인적
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
의하기 위하여 부실관련자 명
단공개심의위원회(이하 “명단공
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④ 명단공개심의위원회는 공개
대상 부실관련자(이하 “공개대
상자”라 한다) 선정, 소명내용
심의 등 명단공개에 관련된 주
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⑤ 공사는 명단공개심의위원회
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 부실

관련자(이하 “공개대상자”라 한다)에게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임을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명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며, 통지 방법 등과 관련된 사항은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송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.

⑥ 제5항의 소명기간이 경과한 후 공개대상자의 소명내용 및 채무액의 변제실적 등을 고려하여 명단공개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한 후 공개대상자를 확정한다.

⑦ 제6항의 부실관련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제1항의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준, 공개대상선정 절차, 공개기간 등 세부사항 및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